

노사관계 동향

노사분규 동향

-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보다 크게 감소
- 2007년 10월 24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크게 감소함(표 1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95건으로 전년동기(122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도 447,733일로 전년 동기(1,133,075일)대비 60.5%나 감소함.

〈표 1〉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 개소, 일)

	2006. 10. 24	2007. 10. 24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개소)	122	95
근 로 손 실 일 수 (일)	1,133,075	447,733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노동정책 동향

- ◆ 노동부,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 발표
- 노동부는 여성과 고령자(50세 이상)를 상대그룹과 비교하여 고용상 평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평

등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상 지위가 2005년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발표

- 지난해 성별 고용평등지표는 56.5%로 2005년 55.7%에 비해 다소 나아진 반면,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112.0%로 2005년 121.1%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고용평등지표란 시간당 임금비율(노동보상도), 관리직 비율(노동위상도), 상용직 비율(직업안정도), 임금근로자 비율(노동참여도) 등 4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여성과 50세 이상 고령자를 각각 상대그룹(남성 및 50세 미만 근로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위치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100보다 높으면 고용상 평등수준이 높고, 낮으면 평등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계약관계보호·모성보호·노동3권 보장 및 관련법률 제·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계약존속 보호, 보수지급 보호, 성희롱 예방·구제,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균등처우, 노동3권,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을 적용해 이들 종사자가 산업재해,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여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사업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권고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노사단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입장

-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사와 업무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에 대한 무리한 보호입법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의 파급효과를 간과한

것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최선임을 강조

- 한국노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안은 노동2권도 아닌 단체결성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보장한 기형적 형태의 법안에 불과하며, 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

◆ 노사단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에 대한 입장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도 경영성과 상여금을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
- 경총은 이와 관련하여 ‘경영평가상여금’은 당초 입법취지로 삼았던 불합리한 차별의 대상이 아니며, 차별판단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유를 차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므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노동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주장
- 반면, 양대 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기지노위의 차별판정으로 우리 사회전반에 부당한 차별시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한국노총은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조건 이외에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에 있어서도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요구가 수용되길 기대
 - 민주노총은 비정규근로자의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한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차별시정신청권을 개별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부여해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판정이 실질적 차별해소를 하려면 사측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임을 강조

◆ 노사단체, 대선관련 정책요구안 및 정책건의서 발표

-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근본적 개혁을 통한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은 사회정책의 근본적 개혁방향을 이

루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14대 정책요구안을 확정

- 14대 정책요구안은 비정규직의 차별 및 저임금 해소, 정규직 전환 촉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및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확보, 노사발전재단 강화, 노사자율파트너십 촉진 및 전임자 임금보장, 공적연금 일원화, 국민연금 정상화, 1가구 1주택 대출금리 대폭 인하, 전월세 고통 일소, 노동자 건강권 확보!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보, 본인부담 축소, 의무교육 확대, 사교육비 통제, 대학등록금 경감, 청년실업 해소, 연령차별 금지, 65세 정년보장, 노사주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개혁, 선진국형 평생학습체제, 실노동시간 연 2000시간 이내 단축, 출산·양육비 사회화, 만5세 이하 무상보육,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 약탈적 투기자본 규제,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지배구조 민주화,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등임.

○ 경총은 차기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국가 건설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를 차기 정부의 국가 비전과 목표로 제시

- 정책건의서에는 시장경제체제 재확립, 법치주의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일하는 복지실현 등을 차기정부의 이념적 좌표로 제시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3개의 추진방향과 7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주요노동일지

(2007. 9. 20~2007.10. 19)

연·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7.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노조: 외환위기 10년 대토론회 · 민주노총: 주택정책 토론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선 여성노동의제 시리즈 정책토론회 2(돌봄서비스 정책, 좋은 일자리·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노련: KT링크스노조 2차 단체교섭, 로지시스노조 단협 실무교섭 · 민주노총: 산별특위 기획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랜드그룹: 전국동시다발 집중 매장타격 투쟁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수연맹: 공기업 주식상장 대응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병원: 노조,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

연·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9. 28		· 한국노총 : 제36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 철도노조 : 전국지부장 회의	
9. 29		· 철도노조 : 비정규직 조합원 총회	
10. 1		· 정보통신노련 : SK텔레콤노조 임단협 실무교섭 · 정보통신노련 : 한전KDN노조 지부위원장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공고 · 공무원노총 : 정부 공무원 임금정책 규탄 특별기자회견	
10. 2		· 공공연맹 : 주택관리공단노조 제5대 위원장 선거 · 전국공무원노조 : 물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10. 4	· 한국노동연구원 : 21세기 고용정책을 위한 비전과 전략(고용전략 국제세미나)	· 민주노총 : 외주용역화 반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간접고용 노동자 증언대회	
10. 5	· 한국여성민우회 : 창립 20주년 기념 노동 심포지엄 2(전환기의 여성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공공연맹 : 근로복지공단노조 제16대 위원장 선거를 위한 총회 · 민주노총 : 중앙집행위원회 · 학습지노조 :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술교육 규탄집회 · 전국공무원노조 : 제31차 임시중앙위원회 · 철도노조 : 임시대의원대회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지노위 조정회의
10. 6	· 한국여성노동자회 : 대선 여성노동의제 시리즈 정책토론회(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 운수노조 : 임시대의원대회	
10. 7		· 한국노총 : 제1차 전국노동자대회 '정책연대 승리 및 하반기 투쟁선포'	
10. 8		· 건설노조 : 제21차 상집회의 · 전국공무원노조 : 서울본부 제1차 확대임원회의	
10. 9	· 사무금융노조 :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 공공연맹 : 공공 공대위 대표자회의 · 정보통신노련 : KT링커스노조 4차 단체교섭, SK텔레콤노조 임단협 실무교섭 · 손보노조 : 중앙위원회 · 민주노총 :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10. 10	· 공공연맹 : 한국산업안	· 보건의료노조 : 산별기획단회의	· 서울대학교병원 : 파업 돌입

연·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단노조 안전보건 발전방향 토론회 ·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 운수노조: 버스본부 임시대의원대회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연맹: 한국마사회노조 위원장 취임식 · 정보통신노련: KT링커스노조 5차 단체교섭 · 증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병원: 본교섭 개최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병원: 실무교섭 개최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운수노조: 화물연대 임시대의원대회 · 전국공무원노조: 제21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연구원: 제4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대응 정규직노조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제10회 KLI 사람중심경영 조찬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회의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선거 · 금융감독원노조: 이·취임식 및 대의원대회 · 민주노총: 한-EU FTA 저지 결의대회 · 서울시철도: 노조 9대 집행부 출범식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금융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 상수도 공사화 규탄 기자회견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2008년 사업 기획위원회 1차회의 · 보건의료노조: 산별기획단 2차 회의 · 전국금속노조: 중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랜드그룹: 노동사회단체 단식농성단 발대식